

“제2 김태복 사건” 거센 비난

시주금이 또 뇌물로 규정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운)는 10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재임기간 중, SK그룹 측에 북한산 승가사에 10억을 시주토록 권유한 것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석탑 건립을 위해 시주금을 받았다가 뇌물수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태복 사건과 유사하다. 재판부는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남기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도 외압 사실은 인정하되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SK텔레콤에 특별히 유리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2년6월(구형량 5년)로 한다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이와 관련 즉각 유감 성명서를 발표, 사법부의 유죄판결

“이번 판결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시주 등의 권선 행위가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닌에도 불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결정으로, 이는 종교계에 대한 위협적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자선기관이 헌금

회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도 보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스님은 “종교적, 정서적 만족을 위해 자원교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법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이남기, 김태복씨 사건이 빚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시주금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주금의 뇌물 인정 공방은 앞으로 불교계와 사법부의 대립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계종은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순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불사권유가 ‘법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법부는 같은 날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그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사회문제화 된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불교계 시주금만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재판부 ‘SK외압’ 인정... 시주금 ‘뇌물’ 규정

조계종 권선행위에 법의 잣대 “위협적 판결”

을 ‘제2의 김태복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사법부가 시주금을 뇌물로 단속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1,700여 년간 권선과 시주에 의해 지속돼온 전통불교권선에 심각한 훼손을 주었음 뿐만 아니라, 불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 해풍 행위라는 것이다. 조계종은 또 유감 성명서에서

과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불교계는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의 자원 교류가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는 특히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물질만능 사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사법부는 같은 날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는 그간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가 사회문제화 된 전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불교계 시주금만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불교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금강대 군승 파송교 지정 추진

천태종, 필요절차·조건 등 파악 작업 첫 졸업생 배출 2007년까지 마무리

천태종과 금강대가 군종장교 파송종단 및 군종장교 파송학교 지정 추진한다.

올해 3월 첫 신입생을 받은 천태종립 금강대는 불교문화학부 학생들의 군종장교 파송을 위해 천태종 총무원에 파송 관련 종법령 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군종장교 파송학교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지정 조건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천태종 총무원도 군종장교 파송종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제도 및 종법령 제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학생들의 군

종장교 진출을 통해 종단의 군포교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불교 일꾼이라 할 수 있는 청년불교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강대 총무처장 황장스님은 “최근 국방부에 군종장교 파송을 위한 절차와 조건 등을 문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며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2007년까지 군종장교 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종단에서 그동안 군 포교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원해 왔고 종단의 의식이나 의제

가 조계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학생들의 군종장교 파송을 위한 기본 요건은 갖추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불교 군종장교를 파송하고 있는 조계종과 원만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강대의 군종장교 파송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진각종이 위탁대 불교대학 학생들의 군종장교 파송을 추진했다가 조계종의 반대에 부딪혀 파송학교 지정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군종장교 파송에 필요한 충족요건을 완벽히 갖춰나간다는 조계종과 원만한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태종 총무원 관계자는 “진각종 위탁대의 신청서류가 국방부에서 보류된 것은 기존 파송종단인 조계종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등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강대 학생의 군종장교 파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최근 두달여 동안 종도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각종 선거법과 사면 관련법 등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종헌·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종회사무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취합된 의견들

은 총무원장 선거법·종회의원선거법·교구총회의원 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 총무원법·교육법·포교법·종무원법 등 중앙종무기관 관련법, 사면법·승려법 등 징계에 관한 법, 성정보존법 등에 대한 제·개정 요구로 압축된다.

선거·징계관련법 개정 요구 많아

조계종, 종헌·종법개정 의견 수렴 결과

의견을 낸 곳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앙종무기관과 종정기관 외에 분사주지, 종회의원, 재가단체 등이다.

먼저 각종 선거법과 관련, 총무원장 선거법의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및 선거운동원 자격기준, 정책 토론회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회의원 선거법에서는 전문성을 고려한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이 이뤄지기 위해 자격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교구 재적승비례로 종회의원 수를 차등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무기관 관련법에서는 성정보존을 강화하고 사찰박물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성정보존법 개정 및 박물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찰 예산을 종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찰예산회계법을 제정하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주지직을 그만둘

경우 다른 종무직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에 관한 법을 분리해 따로 제정하고, 시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면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도 있다. 은혜사 주지 법타스님은 별빈조항을 삭제하는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포교원은 군승특별교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400여개가 넘는 군법당과 군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교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 의견들은 일차적으로 종헌·종법 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실무팀에서 정리해 소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종법들이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종헌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문중과 계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제·개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종헌·종법 개정특위는 논란이 되는 종헌·종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교구와 문중, 종회 계과간의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조정이 쉽지 않고, 또 제·개정 법률에 대한 세부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으로 특위가 개·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종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실무팀에서 정리해 소위원회 보고를 거쳐 전체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종법들이 제·개정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종헌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문중과 계과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에 제·개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종헌·종법 개정특위는 논란이 되는 종헌·종법 제·개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교구와 문중, 종회 계과간의 의견을 좁히려는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조정이 쉽지 않고, 또 제·개정 법률에 대한 세부안 마련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올해 안으로 특위가 개·개정안을 종회에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전북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8월 4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3차 교육이 전주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8월 4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전주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63-230-2821)
- 수강료: 무료(교재비 6천원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전북지사
- 지사장 조기사 063-255-2274
- 모집 인원: 15명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스리랑카 수재민 돕기

불교국가 범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 조계종과 본지를 비롯한 불교계 언론사들이 5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실의에 빠진 스리랑카 수재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펼칩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800여명의 인명피해와 50만명 이상의 수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교국가 스리랑카 국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다. 성금은 스리랑카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후원: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성금 보내 주소: 총무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 023501-04-004943 (재) 불교중앙교원
-농협 053-01-255568 (재) 불교중앙교원

광릉 봉선사 연꽃 축제 연꽃 그 물들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신록이 살아 숨쉬는 수목들의 천국 광릉 봉선사에서 7월 19일 ~ 20일까지 야단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영산재와 음악회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연산대제
일 시: 2003년 7월 19일(토) 오후 5시
집 전: 인목스님
- ◆ 산사음악회
일 시: 2003년 7월 19일(토) 오후 7시
장 소: 봉선사 연못주변
사 회: 진명스님
출 연: 안치환, 한영애, 심진스님, 박세빈, 이창휘, 사물놀이(국립국악원), 박은하(뽕가리춤), 허진(시 낭송)
- ◆ 놀이마당, 국악한마당
(지역주민 노래자랑/ 백일장/사생대회/사진전시회 및 사진촬영)
일 시: 2003년 7월 20일(일) 오후 2시부터~
대 상: 지역주민, 어린이, 청소년, 불교사진작가동호회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TEL: (031)527-5974
후원: 봉선사 본·말사, 남양주시, 봉선사 신도회